

천주교인권위원회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천주교인권위원회

전화:02-777-0641 팩스:02-775-6267 메일:chrc@chol.com 홈페이지:http://www.cathrights.or.kr

문서번호 : 천인2013-1024-01

수 신 : 대구교도소장

참 조 :

발 신 :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만화책 반입 불허 조치에 관한 질의

날 짜 : 2013년 10월 24일(목)

문 의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02-777-0641,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입니다.
3. 최근 우리 위원회는 대구교도소에서 만화책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진정인에 따르면, 2013년 9월 23일 오전 11시 40분경 대구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다음과 같이 대화했다고 합니다.

■ 진정인 : 책 영치품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직원 : 이거 만화는 안 들어갑니다.

■ 진정인 : 만화는 왜 안 되는데요?

■ 직원 : 만화는, 도서 받는 규정에 만화책은, 저기 학습만화 외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 진정인 : 형집행법 규정 상으로 유해간행물 지정된 게 아니면 구독을 허가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 직원 : 근데 지금 저희들은 만화 자체를 우리 안에 규정에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 진정인 : 교도소 규정에 그런가요?

■ 직원 : 삼국지, 수호지, 이런 거는, 학습지, 뭐 천자문이나 이 학습지 만화는 들어가는데

만화는 지금 못 받게 합니다.

■ 진정인 : 대구교도소 규정인 건가요?

■ 직원 : 아니요. 대구교도소 규정은 아니구요.

■ 진정인 : 그러면 규정이란 게 어디를 찾아봐야 되죠?

■ 직원 : 영치금품 도서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만화는 안 받거든요.

■ 진정인 : 아닌 걸로 알긴 하지만 알겠어요.

4. 위 대화가 사실이라면, 대구교도소는 만화책 중 특정 도서에 대한 반입만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 만화를 제외한 모든 만화책의 반입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수용자에게만 반입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용자에 대해 만화책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현행 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이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도 만화 또는 교육용 만화에 대한 어떠한 별도 규정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만화책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만화책이라는 이유로 또는 교육용 만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입을 불허한 것이라면 이는 형집행법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조치는 만화가 단순하고 저급한 장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을 반영한 것일 뿐, 만화가 문학과 예술의 한 부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6. 이에 우리 위원회는 대구교도소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 1) 대구교도소는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용 만화를 제외한 모든 만화책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습니까?
- 2) 해당 만화책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만화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용자에게 반입을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3) 귀 기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의 목록을 확보하여 도서 반입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 4) 진정인이 겪은 사건은 대구교도소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거나 업무상 착오입니까?
 - 5)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7. 위 질의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2013년 10월 31일(목)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